

# 1920~1930년대 낙동강 하류부의 일천식하천개수공사와 지역민의 대응

고나은\*

## | 목 차 |

- I. 머리말
- II. 낙동강 하천개수공사의 배경과 진행과정
- III. 일천식(一川式)하천개수공사의 폐해와 지역민의 대응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일제는 하천개수사업의 시행을 통해 낙동강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홍수의 피해가 심한 평야 지역인 낙동강 하류부였다. 일제 당국은 이 구간의 일천식하천개수공사를 통해 물리구역의 증가와 구역 내의 방·배수, 생산 증진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식민지적 개발은 이 지역 일본인 지주들과 일부 조선인 유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층 농민들은 극심한 수해와 개발로 인해 일상적 이해관계의 충돌, 더 나아가서는 생존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식민지적 하천 개발이 가져온 수해는 민족별·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은 식민지 권력과 지역사회, 지역사회 내 지역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 [khye2@naver.com](mailto:khye2@naver.com)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적·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움직임을 취했다. 다양한 진정 운동과 기성회의 결성, 군민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식민지 권력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 및 지역 내의 이해관계 획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이렇듯 사업별·지역별로 생겨난 중층적 이해관계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교차점에서 지역정치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대응방식은 일종의 근대를 체화해 나가는 경험의 장이 되고 있었다.

일천식공사와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의 경관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 변화가 가져오는 다면적 이해관계에 저항하는 과정이 지역사회 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촉발시켜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일상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낙동강, 식민지적 개발, 일천식하천개수공사, 지역정치, 하천개수사업

## I. 머리말

일제는 조선의 무능과 정체를 부각시키고 조선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치산과 치수를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을 병합한 후 토지조사와 함께 하천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14년 4월 부령 제46호로 <하천취체규칙>을 발표, 중요 16하천을 지정하여 조선총독부의 직접 관할 하에 두었다. 19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천조사에 들어갔으며 1923년에 주요 11하천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마쳤다.<sup>1)</sup> 1925년부터는 하천개수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927년

1) 제1기 치수조사사업(1915년~1928년)은 대령강, 청천강, 대동강, 재령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용흥강 및 성천강의 14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 주요 11개 하천조사는 1923년에 조사 작업이 완료되었다(조선총독부,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④ : 조선하천조사서(1929년)』, 국토해양부, 2010, 24쪽. 허수열, 『일제강점기 하천개수의 식민지적 성격·만경강 개수를 중심으로.』, 『학

1월 22일 제령 제2호로 <조선하천령>을 발표함으로써 조선 하천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를 확립하였다.<sup>2)</sup>

주요 직할하천의 개수는 1938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로도 직할하천, 중소하천 개수사업은 계속되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전체를 관통했던 조선의 치수조사사업과 하천개수사업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하천개수 그 자체를 다룬 관련 연구 성과는 매우 적다. 기존의 연구들은 조선의 치수사업 및 하천개수사업에 주목하기보다는 수리조합과 하천 일대의 사회경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3)</sup> 국가기록원에서 『일제문서해제-토목편-』을 발간한 이후 하천개수사업을 다룬 연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마저도 미미한 실정이다.<sup>4)</sup>

그 중 만경강개수공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하천개수가 갖는 식민지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주목된다. 이리토목출장소의 직원과 청부업자의 분석, 하천개수공사에 고용된 노동자의 민족별 임금격차 및 개수공사의 직접적 수혜대상 분석을 통해 민족별 경제적 불평등을 조명한 이 논문을 통해 하천개수공사라는 거대한 식민지적 개발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이후 하천개수사업의 전반적 전개과정을 세밀하게 밝히고 토목청부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천개수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주목한 연구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일제의 치수 정책이 일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민족, 계급모순과 식민정책의 모순이 더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내고 있다.<sup>6)</sup>

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1-2, 2012, 28쪽.

2) 조선총독부, 앞의 책 ④, 12쪽.

3) 주요 연구로는 홍성찬·최원규 외,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해안, 2006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수리조합 사례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4) 허수열 외, 『제1부 하천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일제문서해제-토목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10.

5) 허수열, 앞의 논문, 2012.

6) 鳥海 豊, 『일제하 수리조합사업과 일본인 토목청부업자』, 『한국문화』 68, 2014. 최병택, 『1920년대 초~1930년대 전반기의 하천개수사업과 토목청부업 비리』, 『사학연구』

하지만 이들 연구에도 불구하고 하천개수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양적 부족에서 오는 공백이 적지 않다. 하천개수사업 자체의 제도적·실무적 진행과정과 실제적 성과는 물론이거니와 주요 14개 하천 각각의 개수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전국 단위의 하천개수사업을 각 지역 하천별로 정리함으로써 식민지적 하천 개발의 전반적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개발에 의해 피해입고, 차별받고, 갈등하고, 저항하고, 또 적응해 나가는 각 하천 유역 지역민들의 삶을 구명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내재적 발전론과 근대화론에서 더 나아가 식민지 사회 내부의 ‘근대성’과 ‘식민지공공성’에 주목하고 있다.<sup>7)</sup> 또한 국가사 중심의 역사연구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대안적 공간인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지역의 다양성·복잡성·역동성을 읽어내는 지역사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8)</sup>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거시적 연구들과는 달리 식민지 생활공간에 주목하면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지(有志)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밝히

118, 2015; 「일제 강점기 하천개수사업의 전개와 그 문제점」, 『인문논총』 75-2, 2018. 고태우, 「식민 토건업자의 ‘과점동맹’: 1920~30년대 초 조선토목건축협회연구」, 『역사문제연구』 38, 2017.

7)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시대』, 역사비평사, 2003.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삼인, 2006. 松本武祝, 『조선농촌의 식민지 근대 경험』, 논형, 20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8)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 학연문화사, 1998. 한국사연구회,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1, 1998. 이윤갑, 「생활세계로서의 지방사회와 지방사연구」, 『대구사학』 64, 2001. 이혜준, 「지역학의 범주와 향후 연구과제」, 『안동학연구』 3, 2004.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경향과 과제」, 『석당논총』 35, 2005. 양정필,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문제연구』 17, 2007 등을 통해 연구사의 흐름을 참고할 수 있다.

거나 식민지 사회 내부에서 일상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다면적으로 갈등·대립·타협하는 지역민들의 지역정치 활동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sup>9)</sup> 하천개수사업이라는 식민지적 개발 역시 개발 자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개발이 가져다주는 현안이 촉발시키는 지역정치 양자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제가 시행한 국비지변하천개수공사 중에서도 낙동강 하천개수공사에 주목해보고자 한다.<sup>10)</sup> 먼저 잦은 홍수로 인해 하천개수공사에 대한 강한 수요가 형성된 낙동강 유역, 그 중에서도 낙동강 하류부에서 전개된 소위 일천식하천개수공사의 배경과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낙동강 하천개수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는지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때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은 일제시기 김해군 13면 중에서도 낙동강 하류 지역에 해당되는 가락면, 대저면, 명지면, 녹산면으로 이들 지역은 현재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가락동, 대저1·2동, 명지동, 녹산동이다.<sup>11)</sup>

- 
- 9) 지역엘리트 지역유지와 지역정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본 논문의 주제 및 지역정치와 관련하여 참고한 일부 논문만을 기재한다. 박철하, 『1925년 서울 지역 수해이재민 구제활동과 수해대책』, 『서울학연구』 13, 1999. 김영미, 『일제시기 도시문제와 지역주민운동-京城지역 성북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8, 2007. 이용기, 『일제시기 면 단위 유력자의 구성과 지역정치-전남 장흥군 용산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2009. 엄복규, 『일제하 도시지역정치의 구도와 양상-1920년대 경성 시구개수 이관과 수익세 제정 논란의 사례 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 2011. 정계향,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구연양군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7, 2013).
- 10) 廣瀨貞三, 『植民地期の治水事業と朝鮮社會-洛東江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1999; 『一九三四年朝鮮南部の洪水と復旧活動-洛東江を中心に』, 『年報朝鮮學』 21, 2018. 히로세 테이조(廣瀨貞三)의 논문에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식민지기의 치수사업과 홍수 피해를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데 도움이 된다.
- 11) 일제 강점기 김해군의 13면은 김해면, 하계면(진영면), 주촌면, 진례면, 이북면, 생림면, 상동면, 하동면, 장유면, 가락면, 대저면, 명지면, 녹산면이다. 명지면과 대저면은 1978년 2월 15일 부산직할시에 편입되었고 가락면과 녹산면은 1989년 1월 1일 편입되었다.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속해있다(이병태, 『김해지리지』, 김해문화원).

다음으로 일천식개수공사라는 하천 개발이 낳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낙동강 하류부를 활동 무대로 하는 여러 주체들, 예컨대 정부 당국자들과 지역민들, 대지주 및 중소지주들과 일반 농·어민들, 지역 유지와 지역민들,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는 몇 가지 지점들을 확인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의 현안 앞에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충돌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해결되는 식민지 지역정치의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로써 일제 하천개수공사의 일면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식민지적 개발이 지역사회의 질서와 지역민의 경험을 어떻게 재편해나가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낙동강 하천개수공사의 배경과 진행과정

### 1. 낙동강 하류부의 홍수피해 상황

#### 1) 1920년대 홍수피해

한반도에는 일제강점기에도 홍수가 빈발하였으며 낙동강 하류부에 위치한 부산과 김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sup>12)</sup> 그 중에서도 1920년과 1925년의 대홍수, 1933년과 1934년에 걸친 대홍수는 낙동강 하류부 주민들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큰 재난이었다. <표 1>에서 연도별 낙동강 수해상황과 피해규모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991, 296~341쪽).

12) 한반도 내 대홍수는 연속적(1916년, 1919년, 1920년, 1922년, 1923년, 1925년, 1926년, 1928년, 1930년, 1933년, 1934년, 1936년)으로 발생하였다(조선총독부,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⑥: 조선의 하천(1935)』, 국토해양부, 2010, 20쪽).

<표 1> 연도별 낙동강 수해 상황

연도	범람면적 (정)	토지 피해(정)	가옥피해 (호)	사망인원 (명)	-	-	-	피해총액 (엔)
1916	16,140	4,345	2,641	151	-	-	-	6,288,299
1917	5,141	3,041	1,260	103	-	-	-	1,921,912
1918	3,041	1,310	1,107	77	-	-	-	7,456,661
1919	11,140	4,282	420	97	-	-	-	4,541,317
1920	37,829	21,482	7,170	1,100	-	-	-	33,946,592
1921	1,879	197	62	6	-	-	-	1,234,118
1922	5,726	916	264	17	-	-	-	1,175,198
1923	2,785	1,195	133	22	-	-	-	245,925
1924	4,060	149	204	5	-	-	-	1,662,165
1925	24,958	2,924	6,510	47	-	-	-	28,185,487
1926	5,200	310	243	5	-	-	-	3,302,216
1927	173	28	3	-	-	-	-	87,659
1928	-	-	-	-	-	-	-	2,838
1929	-	-	-	-	-	-	-	2,758,705
1930	-	-	-	-	-	-	-	2,324,451
1931	-	-	-	-	-	-	-	344,000
1932	-	-	-	-	-	-	-	630
1933	-	-	-	-	-	-	-	13,634,815
연도	범람면적 (정보)	토지피해 (엔)	가옥피해 (엔)	사망인원 (명)	농작물피해 (엔)	공작물피해 (엔)	가축피해 (엔)	피해총액 (엔)
1934	113,983	4,884,963	1,631,102	133	13,085,638	3,038,819	12,563	22,653,085

\* 출처: 조선총독부, 『조선하천조사서(1929년)』, 국토해양부, 2010, 260쪽; 『1934년 남선의 홍수(1936년)』, 국토해양부, 2010, 7쪽 참고.

1920년 7월 21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에 제방이 붕괴되었다. 김해면 불암리, 가락면 북정리·상덕리·제도리·대사리 등지의 가옥이 침수 파괴되었고 농작물도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인해 약 2명이 사망하였으며 피해액이 총 30만원에 이르렀다.<sup>13)</sup> 이 홍수로 대저면에서는 익사한 30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sup>14)</sup>

13) 『매일신보』 1920. 07. 29. 4면 5단, ‘김해대홍수’.

14) 『동아일보』 1920. 07. 29. 3면 6단, ‘미인의 사체’.

1925년 7월에는 ‘을축년 대홍수’라고 불리는 40년 만의 대홍수가 님다. 태풍의 영향으로 약 400mm의 폭우가 쏟아져 낙동강 하류부의 김해군 가락면 일대와 대저면 일대, 하동면·이북면·장유면·녹산면·진례면·하계면 일부가 수해를 입었다.<sup>15)</sup> 또한 대저수리조합의 방축이 무너져 내려 대저면 일대 약 2,000여 호의 가옥(인구 14,000여 명)이 침수되었다. 대사리 주민 800여 명은 불암리로, 북정리·상덕리·제도리의 주민 1,200여 명은 산으로 피난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214호의 가옥이 유실되고 624호의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4,338호의 가옥이 침수되었다.<sup>16)</sup> 또한 대저면 2,000여 정보, 촌정농장 1,500정보 등 많은 전답이 물에 잠겨 농작물의 피해도 극심하였다.<sup>17)</sup> 이재민은 2만 여 명에 이르렀다. 을축년 대홍수로 인한 피해 총액은 약 47,000,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김해 지역에서만 수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었다.<sup>18)</sup>

7월의 홍수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인 9월 6일, 낙동강 유역은 또 다시 폭풍우와 해일의 피해를 입었다.<sup>19)</sup> 이 폭풍우에 가옥과 시장의 노점 등이 파괴되었으며 농작물도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다. 전신 전화와 교통기관도 전부 두절되어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sup>20)</sup> 10월이 되어서야 김해수재동포구제회에서 피해상황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파악된 김해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15) 『매일신보』 1925. 07. 23. 3면 7단, ‘수국화한 김해수재’.

16) 『시대일보』 1925. 07. 24. 2면 3단, ‘참담한 경남수해’.

17) 『동아일보』 1925. 07. 16. 2면 6단, ‘가옥유실 육백 여 호’.

18) 『시대일보』 1925. 07. 18. 2면 11단, ‘홍수 피해 총액 사천 칠백만 원’.

19) 『시대일보』 1925. 10. 19. 6면 1단, ‘수풍재, 해일피해 통계’.

20) 『동아일보』 1925. 09. 11. 7면 1단, ‘밀양미증유의 참화, 유실도피 1,400호’.



<표 2> 1925년 김해의 홍수 피해 상황

	시상	부상	가족피해			주택			답			전				도로	교량	제방			
			사	상	행불	전계	반계	유실	침수	매물	침수	유실	작물 피해	매물	침수				유실	작물피해	
현재 부산시	가락	5	12	3	1	7	183	233	13	672	547	20,640	290	768,971	5	140	5	115,182	547	5	2,183
	대저	-	8	1	1	-	382	157	7	1,364	1,527	39,840	161	998,312	769	6,315	547	233,937	1,251	7	615
	명지	-	-	3	-	3	37	36	1	8	-	1,119	-	42,552	-	2,336	26	31,303 (염전 15,000)	688	-	2,674
현재 김해시	녹산	-	-	-	5	-	21	24	-	85	5,320	-	30	213,019	-	-	-	염전 2,000	95	4	2,076
	김해	-	-	-	-	-	70	41	-	278	42	12,863	-	63,707	-	25	-	-	137	-	423
	이북	-	2	-	-	-	83	68	5	39	20	6,661	-	103,974	125	6,815	20	265,773	-	-	-
	하동	1	1	-	-	-	38	6	-	108	112	5,392	-	-	214	766	-	1,155	5	-	-
	장유	-	-	8	1	-	5	8	-	46	108	4,700	22	128,648	-	200	-	2,010	-	-	40
	주촌	-	-	-	-	-	2	5	-	3	59	2,061	-	136,154	-	7	-	8,232	70	1	731
	진례	-	-	-	-	-	-	3	-	-	40	1,373	2	250,353	8	67	-	1,542	52	3	22
	하계	-	-	-	-	-	28	99	10	68	159	5,031	-	331,705	5	4,057	-	148,140	-	2	340
	생림	-	-	-	-	-	80	195	23	86	3	1,867	-	73,720	-	6,657	-	83,670	62	-	90
	상동	-	-	-	-	-	32	19	9	20	20	4,415	-	113,700	100	3,862	71	-	355	-	35
합계	6	23	15	8	10	961	894	78	2,867	2,666	117,122	455	3,996,512	1,228	43,746	669	885,834 (염전 17,000)	3,212	23	9,419	

\* 출처: 『시대일보』, 1925. 10. 19. 6면 1단, '수풍제, 해일피해통계'.  
 \* 제시된 수치는 도로의 경우 파손·매물·유실, 교량의 경우 파손·결계, 제방의 경우 파손·결계, 파손의 총합이다.  
 \* 제시된 수치의 단위는 전담의 경우 매물, 침수, 유실은 반(反), 작물피해는 원(圓)이며 도로·교량·제방은 직(間)이다.  
 \* 신문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기사 내용 자체에 수치 및 함께 오류가 많아 대략적인 수치만을 참고한다.

사상자가 29명, 가옥의 파손이나 유실·침수도 4,800건에 이르렀다. 도로와 제방, 교량의 파손도 상당하였다. 전답의 매몰이나 침수, 유실도 심각하여 잇따른 수재로 인해 경상남도의 벼농사는 전년도 대비 약 18만석 이상의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중 김해에서만 41,750석의 피해가 예측되었다.<sup>21)</sup>

## 2) 1930년대 홍수피해

1933년과 1934년 2년간의 수해는 일상으로 돌아가 을축년 대홍수의 상흔을 지워가고 있던 김해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뜨렸다.<sup>22)</sup> 낙동강에 삶을 기대고 있는 김해 전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적으로 상류에 비해 하류의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큰 비로 인해 1933년 7월 1일 대저면의 제방이 터지면서 대저평야가 침수되었으며 가락면 수리조합 구역과 하동면 일대, 그 부근의 농가 1,230호가 물에 잠겼다. 교통과 통신기관 두절로 주민 7천여 명의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sup>23)</sup> 7월 2일 당시 강우량은 414mm 정도였으며 낙동강 하류부의 면·동·리 전체가 위험상태에 빠져있었다.<sup>24)</sup> 홍수의 수심은 을축년보다 낮지만 피해는 그 이상이라는 예측이 잇따랐다.<sup>25)</sup> 수해가 발생한지 일주일 이상

21) 『동아일보』 1925. 09. 21. 4면 1단, ‘경남도작 감수 일만 육천 석 예상 거번 수풍재의 손해’.

22) 1930년대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준 홍수는 1933년·1934년·1936년에 걸쳐 발생하였다. 1936년 조선 중남부 풍수해(경남 지역은 8월 26~28일)로 낙동강 유역 및 부산·김해 일대의 피해도 매우 컸으나 이 당시 경상남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은 진주군 진주읍, 밀양군 삼랑진, 남해군 삼동면,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었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1936년의 풍수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일천식공사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일천식공사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는 1936년의 풍수해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朝鮮社會事業協會編, 『昭和十一年の風水害誌』, 1938, 235~265쪽).

23) 『동아일보』 1933. 07. 01. 1면 1단, ‘일천삼백여호 전멸, 칠천주민 생사불명’.

24) 『조선중앙일보』 1933. 07. 02. 2면, ‘김해지방은 전군이 위험상태’.

25) 『동아일보』 1933. 07. 02. 2면, ‘개수조제방 결괐’.

이 지난 7월 9일에 이르러서야 피해 상황의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 결과를 『조선중앙일보』에서 보도하였다.

<표 3> 1933년 김해의 홍수 피해 상황

		피난민(명)	구조수용인원(명)	가옥침수(호)	침수면적(정보)
현재 부산시	가락면	3,550	2,000	1,104	2,144
	대저면	2,520	2,520	1,600	2,000
	명지면		65		
	녹산면		632	29	684
현재 김해시	김해읍	1,880	1,443	376	2,500
	장유면	130		70	611
	주촌면			8	361
	진례면				228
	진영읍	500	453	169	조사중
	이북면	300	300	168	970
	생림면	600	600	181	1,033
	상동면	162	162	119	406
	하동면	1,200		298	814
합계	10,790	9,375	4,122	11,751	

\* 출처: 『조선중앙일보』, 1933. 07. 09. 5면 1단, ‘김해군 하의 수재 피난민 일반 칙백 여’ 참고.

침수 가옥만 4,122호에 이르렀으며 침수면적도 약 12만 정보에 달했다. 목숨만 간신히 건진 피난민이 1만 명이 넘었으며 그 중 구조되어 시설에 수용된 인원만 9,375명이었다. 이들 이재민은 김해읍 합성교·극장·보통학교, 진영·하동·상동보통학교 등에 수용되거나 혹은 노숙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sup>26)</sup> 위생이 좋지 못해 감기·토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이때의 홍수로 김해군 대저면 맥도리에서는 만삭의 산모가 피난하다가 사산하여 산모만 간신히 구제된 일도 있었다.<sup>27)</sup> 비가

26) 『조선중앙일보』 1933. 07. 05. 5면 1단, ‘김해군 내 침수면적 일반이천여정보’. 김해읍 합성교에 530명, 극장 213명, 보교 71명이 수용되었으며 가락식전가 183명, 가락보교 1,005명, 진영보교 1,600명, 하동보교 1,600명, 상동보교 160명이 수용되는 등 합계 5,362명이 구조 수용되었다.

그치고 나서는 육지가 드러났으나 김해 대평야의 모 썩는 냄새에 코를 들지 못할 지경이었다.<sup>28)</sup>

엮친 데 덮친 격으로 7월 24일에는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시작되어 홍수 피해지인 김해는 복구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진영면에 다시 심은 모가 또 침수되었으며 대저면에도 흙물이 다시 침범하였다.<sup>29)</sup> 가락면 북정과 상덕리, 대사리 일대, 봉림리와 제도리는 진흙바다로 변하였으며 하동면 하천부지 일대가 침수되었다. 이재민은 죽림리의 산 위로 피난하였으며 가락면은 폭풍우로 촌락 전부가 날아가 이후 면의 존폐문제가 거론될 정도였다.<sup>30)</sup> 사상자만 40여 명, 파손 및 침수된 가옥이 6,792호였다. 가축 사상과 도로, 교량, 제방의 파손 및 유실도 상당하였다. 경지 18,480정부가 유실, 매몰되었으며 총 피해액은 1,835,752원이었다.<sup>31)</sup>

1934년 7월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전반에 600mm 이상의 강우를 기록한 대홍수가 발생하였다.<sup>32)</sup> 낙동강 유역에는 7월 18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21일부터 낙동강 물이 불어나 범람하기 시작하였다. 이 비로 대저면 소덕리의 낙동강 본제방이 1,400m에 걸쳐 크게 파괴되면서 3만 여 주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sup>33)</sup> 구조선도 보낼 수 없는 지경이었으며 23일 새벽에야 구조대를 보낼 수 있었다.<sup>34)</sup> 김해읍, 가락면 등에도 침수 피해가 심각하였으며 저

27) 『동아일보』 1933. 07. 05. 2면 1단, ‘일망무제이해탁랑, 촉처마다 재민참상’.

28) 『동아일보』 1933. 07. 09. 2면, ‘식량절핍의 재민 삼천사백여명’.

29) 『동아일보』 1933. 07. 26. 2면, ‘홍로지옥에 호우 도묘도 이토를 씻어’; 1933. 07. 27. 2면, ‘복구중의 남조선재지 홍수난으로 우일참해’.

30) 『동아일보』 1933. 08. 01. 2면, ‘일등호답에 복사오척, 완연상전벽해를 실현’.

31) 『동아일보』 1933. 08. 02. 3면 1단, ‘수해피해 통계,’ 『조선중앙일보』 1933. 08. 14. 2면 1단, ‘농작물피해 180여 만 원’.

32) 김원, 『기록적인,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1934년 남부지방의 홍수』, 『하천과 문화』 8, 2012.

33) 조선총독부,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⑦: 1934년 남선의 홍수(1936년)』, 국토해양부, 2010, 40~42쪽.

34) 『동아일보』 1934. 08. 02. 3면, ‘소등된 암흑천지에 애호성으로 단장’.

지대였던 대저면과 진영면의 박간농장은 8월까지도 물이 줄어들지 않아 배로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인명사상자는 120명, 침수가옥은 7,799호, 이재민은 약 35,000여 명에 달했다. 김해평야에는 홍수 이후 야도층까지 들끓어 이재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sup>35)</sup> 처참한 김해의 상황에 고향을 버리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1934년 9월까지도 김해군 대저면, 진영면, 생림면의 1,280호, 6,245명의 이재민이 폐허에서 참혹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수해 총액은 대략 470여 만 원이었다.<sup>36)</sup> 이 홍수로 김해평야가 가장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sup>37)</sup> 게다가 수해 복구도 채 되지 않은 9월 13일 새벽부터 내린 비로 김해읍 외동리, 전하리 부근과 대저면·가락면 일대가 또 다시 수해를 입었다. 이재민들의 움집조차 모조리 휩쓸려 나갔다.<sup>38)</sup> 낙동강 유역의 생활, 그 중에서도 낙동강 하류부 사람들의 생활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었다.<sup>39)</sup>

## 2. 낙동강 일천안(一川案)공사의 논의와 전개

일제는 조선의 하천 개수를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1914년 <하천취체 규칙>을 발포한 이후 1915년부터 1928년까지 제1기 하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하천 조사를 시행하였다. 1925년에 만경강과 재령강, 1926년에 한강, 낙동강, 대동강, 용흥강에 대한 개수공사를 우선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하천 개수에 착수하였다. 이는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출하는

35) 『조선중앙일보』 1934. 08. 19. 6면 4단, ‘김해군 하 수해통계 이재민 3만 여 명’.

36) 『조선중앙일보』 1934. 08. 31. 8면 1단, ‘김해의 오만재민 생사기로운 방황’; 1934. 09. 14. 8면 8단, ‘폐허에서 울고 있는 이재민 만 오천 명’.

37) 『동아일보』 1934. 08. 03. 3면, ‘김해평야 생긴 후론 처음 당하는 대참화, 그 흙 다시 갈고 살게 될는지’; 1934. 08. 04. 5면, ‘진영박간농장은 아직 이해 그대로’; 1934. 08. 07. 2면, ‘옥야대저, 진영평야 상금도 선편으로 교통’.

38) 『동아일보(석간)』 1934. 09. 17. 3면 6단, ‘김해에 또 호우, 양면 수국화’.

39) 『조선중앙일보』 1934. 11. 15. 3면 1단, ‘재해의 김해지방, 종자 없어 파종불능’.

국비지변계속치수사업으로 6개 하천에 대한 총 공사비는 48,400,000엔이었다.<sup>40)</sup> 조선총독부는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면 황폐한 하천과 피폐한 토지로 인한 산업개발 상의 장애가 해결되어 “단당 농산액이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sup>41)</sup>

당시 주요 직할하천 중 수원상태가 가장 나쁜 편에 속했던 낙동강의 개수공사는 10개년 계속사업(1926년~1935년)으로 시행되었다. 공사는 초량 토목출장소에서 담당하였으며 1933년 예산 총액을 15,667,205엔으로 확정하고 준공 시기도 1938년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1934년의 대홍수로 4,300,000엔을 추가하여 최종 총 공사비를 확정하였다.<sup>42)</sup> 이 때 할당된 낙동강 개수비는 6개 하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한강의 약 2배, 대동강의 약 8배가 넘는 액수였다(<표 4> 참조). 주요 직할하천 치수사업비 총액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하천개수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43)</sup>

<표 4> 치수사업비 예산 배분 현황표

하천명	만경강	재령강	한강	낙동강	용흥강	대동강	계
총액(엔)	8,696,579.73	4,357,926.63	8,702,646.88	19,998,176.88	7,208,442.45	2,671,393.58	51,635,166.15

\* 출처: 조선총독부, 『조선의 하천(1935)』, 국토해양부, 2010, 36쪽의 표에서 발췌 수록함.

\* 1935년 현재 기준으로 배정, 배분된 예산 총액임.

\* 비고: 본 표 예산액은 결산상 불용으로 하고 차년도에 추가한 중복액 및 실행 상 결산에서 절감한 액수를 뺀 실시예산액으로 한다.

40) 조선총독부,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⑧ : 1935년 조선 직할하천 공사연보(1938년)』, 국토해양부, 2010, 1쪽.

41) 조선총독부, 앞의 책 ⑥, 2010, 17쪽.

42) 사업 초기 총 예산액은 17,500,000엔이었다. 조선총독부, 앞의 책 ⑧, 2010, 25쪽.

43) 낙동강의 치수사업비가 직할하천개수공사비의 36.3%를 차지한다. 2위인 한강이 13.2%임을 보면 낙동강 공사의 중요성이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廣瀨貞三, 앞의 논문, 1999, 112쪽).

착공 첫 해인 1926년에는 본공사의 시공 없이 공사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sup>44)</sup> 낙동강 개수공사는 하류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류지역으로 공사 범위를 옮긴다는 계획 하에 다음해인 1927년 11월 1일 사이토 총독까지 참석한 낙동강 개수 기공식을 시작으로 낙동강의 협착부 개착, 본류 축제, 남강 방수로 개착, 천주 제거 및 사방공사 등을 착착 진행시켜 나갔다.<sup>45)</sup> 1929년까지 약 27여 건의 본공사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1934년까지 본공사 및 부대공사, 잡공사 포함 372건을 준공하였다 (<표 5> 참조).<sup>46)</sup>

&lt;표 5&gt; 1926~1934년 공사 건수표

종별	본공사					부대공사	잡공사	계
	굴착	축제	호안	수문	기타			
시공건수	26	37	19	13	8	59	237	399
준공	1926년	-	-	-	-	-	28	28
	1927년	1	1	2	-	1	39	48
	1928년	6	3	1	-	-	19	34
	1929년	3	2	4	2	1	9	30
	1930년	3	1	1	1	2	29	42
	1931년	3	3	1	4	-	7	26
	1932년	3	2	2	-	-	21	32
	1933년	4	3	-	-	1	31	46
	1934년	3	10	5	4	3	50	86
	계	26	25	16	11	8	233	372
미준공	-	12	3	2	-	4	27	

\* 출처: 조선총독부, 『1935년 조선 직할하천 공사연보(1938년)』, 국토해양부, 2010, 27쪽 발췌수록.

44) 조선총독부, 앞의 책, 2010, 26쪽.

45) 『동아일보』 1927. 10. 26. 4면 5단, ‘낙동강개수기공.’ 『동아일보』 1927. 11. 03. 4면 1단, ‘총 공비 천칠백만 원의 낙동강개수기공식’.

46) 조선총독부,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⑨: 치수 및 수리답사서(1920년)』, 국토해양부, 2010, 17~18쪽.

1930년부터는 낙동강 개수공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낙동강 하류부 개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sup>47)</sup> 이는 낙동강 하류지역 수리조합 부근과 조합지역 외의 경지를 합한 약 9,917정보에 대한 방·배수공사로 약 90% 이상의 낙동강 개수비가 이곳 하류부와 관련된 개수공사에 사용되었을 정도였다.<sup>48)</sup>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사는 소위 ‘일천안(一川案)공사’ 또는 ‘일천식(一川式)공사’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이는 낙동강 하류에서 갈라지는 물줄기를 하나로 합치는 일천식체절(締切)공사로, 대저면을 중간에 두고 형성된 삼각주를 타고 흐르는 두 물줄기(구포 측과 선암 측) 중 선암 측 갈래의 분기점이 되는 구포역 상류지점에 커다란 갑문을 장치하여 서낙동강을 체절함으로써 물줄기를 구포 측의 동낙동강으로 합치는 대공사였다.<sup>49)</sup> 간단히 말하자면 낙동강 최하류인 김해 대저면 주위의 두 갈래 강물을 한 갈래로 흐르게 하는 공사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부산지국의 한 기자는 낙동강 일천식공사 착공의 배경을 두고 “경남북을 관통하는 낙강 칠백리의 유역에는 빈틈없이 들이라는 들은 모조리 수리조합이 설치되어 수십만 정보의 옥토를 장만하여놓고 산미증식을 도모하는 총독부 당국에서는 그 연안에 농토가 매년 홍수의

47) 낙동강 본류연안 개수계획은 낙동강 하류부 평야, 양산수리조합 부근, 삼랑진 부근, 밀양 부근, 밀양수리조합 부근, 밀양강 합류점 우안, 대산수리조합 부근, 하남수리조합, 초동수리조합 부근, 복면수리조합 부근, 부곡면 부근, 칠서면 부근, 도천수리조합 부근, 영남수리조합 및 남지 부근, 함안수리조합 부근, 이북면 부근, 대산면 부근, 삼랑진-물금 간 협착지역 등으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그 중 낙동강 하류부의 개수가 낙동강 개수공사의 가장 핵심이었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④, 2010, 510~515쪽; 앞의 책 ⑧, 2010, 124~127쪽).

48) 낙동강 하류부는 하동수리조합 이남 동래군 구포면, 사상면, 김해군 하동면, 대저면, 가락면, 명지면, 녹산면에 걸친 하구평야로 그 넓이는 12,000여 정보에 이르렀다. 조선총독부, 앞의 책 ④, 2010, 510쪽. 1935년까지 책정되었던 공사비 예산은 약 1천 7백만 엔이었는데, 그 중 15.8백만엔(약 92.5%)은 낙동강 하류부 개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허수열 외, 앞의 책, 2010, 71쪽.

49) 『동아일보(조간)』 1934. 06. 09. 1면 1단 사설, ‘낙동강공사문제 주민의 요구 들어주라’.



범람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 그 근본의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이 대정15년부터 10개년 계속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sup>50)</sup>

조선총독부의 이 ‘이상적 설계’에 따르면 선암 측 하류에 위치한 김해·대저·가락·장유·주촌·하동 등지에는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는 옥야수만 정보가 새롭게 형성되고 그 최하류인 양산, 명지 양면으로 흐르는 강물을 높이 막아 해수의 침입을 방지하여 연 수십 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예정이었다.<sup>51)</sup> 조선총독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공사 준공 후의 직·간접적 예상 이익은 연 농산액 2,700,000엔이었으며 개수공사비에 대한 이율은 1할 5푼이었다.<sup>52)</sup>

일천식공사의 구체적인 공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구포 맞은편의 대저면 출두리 및 하동면 조내리 부근의 도출부와 기타 하안을 굴착하여 하천 단면적을 증대시키고 하폭은 분기점 상류를 1,080m, 구포 부근을 1,260m, 사상면 엄궁리 부근은 1,980m, 명지하구 부근은 3,240m로 한다. ② 총 길이 24,600m의 우안제방은 하동면 덕산리 사천에서부터 남쪽으로 명지도 남단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한다. 구포 상류에서 서낙동강을 체절하고 대저면 출두리, 사덕리, 소덕리, 덕두리의 하안을 따라 파천(派川)을 체절한다. ③ 좌안제방은 총 길이 8,580m이며 구포를 기점으로 유도리를 거쳐 엄궁리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한다. ④ 상부를 체절한 서낙동강 하구는 조수를 막고 배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류의 녹산리 부근에서 체절을 한다.<sup>53)</sup> 이러한 개수계획은 낙동강 개수공사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낙동강 개수계획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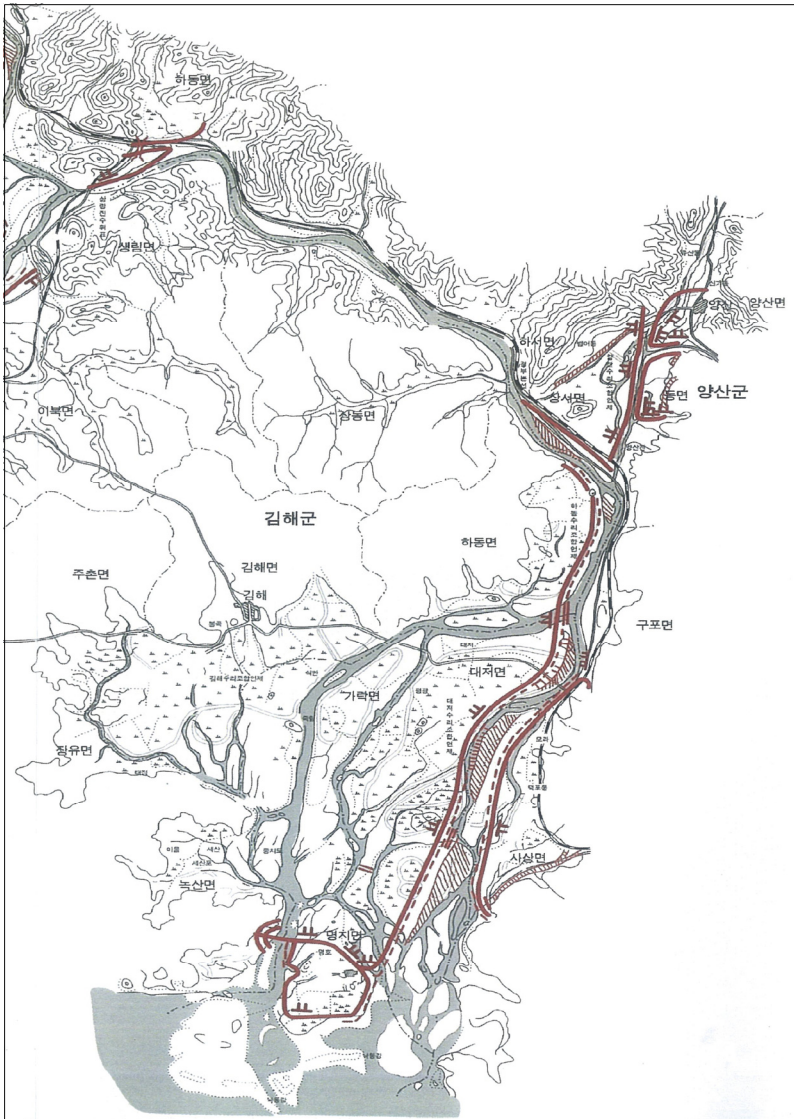
50) 『동아일보(조간)』 1934. 05. 23. 6면 1단, ‘일천식개수 낙동강공사-1. 낙동강일천식공사하는 무엇?’.

51) 『동아일보(조간)』 1934. 05. 23. 6면 1단, ‘일천식개수 낙동강공사-2. 낙동강개수는 어찌 되나?’.

52) 조선총독부,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⑩: 1928년까지 조선토목사업지-하천개수편(1937년)』, 국토해양부, 2010, 130쪽.

53) 조선총독부, 위의 책, 124~125쪽.

<그림 1> 낙동강 하류부 하류부 개수계획도



\* 출처: 조선총독부, 『1928년까지 조선토목사업지-하천개수편(1937년)』, 국토해양부, 131~132쪽.

일제는 일천식공사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개수공사로 개수몽리구역 내의 수해 방지와 생산 증진 효과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개수공사 이후 논만 해도 약 800여 정보가 증가할 것이며 생산액은 해마다 490여 만 엔씩 증가하리라 내다 본 것이다.<sup>54)</sup>

처음 이 공사 소식을 접한 낙동강 하류 부근의 농민들은 경작지의 증대와 안전한 경작 보장이라는 일제 당국의 설계에 열광하였다.<sup>55)</sup> 이 공사가 계획대로만 된다면 낙동강 하류의 노전(蘆田)들은 논으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익의 증대가 곧 대다수 농민의 이득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낙동강 하류부의 옥야는 거의 대부분 조선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에 이미 김해와 대저수리조합이,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함께 삼각주의 상부에 하동과 양산수리조합이 설치되었다. 이들의 설립 시기는 낙동강 14개 수리조합 중에서도 가장 이른 것이었다. 하지만 수리조합의 방수제가 박약하고 배수설비가 미비하여 홍수 때마다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sup>56)</sup>

하류부가 이렇듯 홍수에 취약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조선인들은 이곳에 일정한 집을 짓고 경작에 주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제는 하류부에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일본의 지주 자본가들과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였으며 일본인 지주들은 낙동강 하류부의 노전 및 초생지를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박간방태랑(迫間房太郎)의 경우 1927년 낙동강의 갈대밭 1천 여 정보를 30여 만 원에 매수하고 있었으며,<sup>57)</sup> 이곳에 정착한 일본인 농업이민자들은 논농사와 과수농사를 지으며 낙동강 하류

54) 조선총독부, 앞의 책 ④, 2010, 528쪽.

55) 『동아일보(조간)』 1934. 05. 25. 6면 1단, ‘일천식개수 낙동강 공사’.

56) 조선총독부, 앞의 책 ⑧, 2010, 26쪽. 조선총독부, 앞의 책 ④, 2010, 510쪽.

57) 『부산일보』 1927. 10. 03. 1면 7단, ‘낙동강의 갈대밭 일천여 정보를 30여만 원에 부산의 박간(迫間)씨가 매수’.

부에 정착하였다. 이제 이 지역은 “보이는 농가가 쓸 만한 것은 모조리 조선 사람의 집이 아난” 곳이 되었던 것이다.<sup>58)</sup>

<표 6> 낙동강 하류부의 수리조합 소유지 현황

수리 조합명	소유지 면적(정보)				소유지 비중(%)			설립 연도
	일본인	조선인	기타	합계	일본인	조선인	기타	
김해	1,339	657	-	1,996	67	33	-	1912
대저	1,024	463	326	1,814	56	26	18	1916
하동	414	266	18	698	59	38	3	1920
양산	554	529	-	1,083	51	49	-	1922

\* 출처: 조선총독부,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 1931. 허수열 외, 『일제문서해체-토목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10, 73~74쪽에서 발췌 재인용.

<표 6>에는 낙동강 개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조사한 낙동강 하류부 4개 수리조합의 소유지 면적과 소유지 비중이 나타나는데 그나마 50:5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는 양산수리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 소유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김해수리조합 내 일본인 소유지의 비율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였으며 대저나 하동수리조합도 마찬가지였다.

일천식개수공사 완공 이후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낙동강 일천식개수공사에 대한 1930년의 기사에서 일천식 이후 하류의 많은 노전이 대략 1,730여 정보의 논으로 변경되는데 “가령 1정보의 가격을 평균 1천 원씩 계산한다 하더라도 173만원 가치의 옥답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이 옥답은 “그 대부분이 각일(角一), 박간(迫間) 등 대지주들의 소유이고 관유지가 248정보”로 조선인의 것이 아니었다.<sup>59)</sup> 낙동강 하류부의 기존 경작지와 하천개수공사

58) 『동아일보(조간)』 1934. 05. 24. 5면 1단, ‘일천식개수 낙동강공사’.

59) 『동아일보』 1930. 10. 31. 3면 3단, ‘낙동강개수면 옥답이 천 여 정보’.

를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경작지는 사실상 일본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의 수리조합도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 Ⅲ. 일천식(一川式)하천개수공사의 피해와 지역민의 대응<sup>60)</sup>

#### 1. 공사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민의 피해

##### 1) 공사에 따른 피해와 주민들의 요구

일천식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기는 1931년 봄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착공된 공사였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기간의 대규모 공사였던 만큼 공사를 둘러싼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낙동강 하류의 지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때마다 조선총독부와 경상남도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일천식공사에는 국비 외에도 경상남도 지방비 보조금과 김해군 김해, 가락, 대저, 녹산, 장유, 주촌, 하동 등의 각 면에 할당된 814,154원의 부담금이 책정되었다. 이에 해당 면 주민들은 총독부에 1931년 7월 25일 진정서를 제출하여 부담액의 과중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할당된 부담금의 경감 및 폐지를 요구하였다. 김해군의 녹산과 명지 양면에서 도당국의 설계대로 명지면 동편 제방만 설치해서는 이익은커녕 피해만 입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sup>61)</sup>

60) 조선총독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하천개수 관련 문서들에서는 낙동강 하류부의 공사를 ‘일천안공사’로 부르고 있으나 이 공사를 보도했던 여러 언론사들의 신문 지면에는 거의 대부분 ‘일천식공사’로 기재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III장에서는 이 공사를 ‘일천식하천개수공사(이하 일천식공사)’로 명명한다.

1932년 5월에는 낙동강 연안 유두리(현 부산 사상구 삼락동)의 제1회 굴착공사가 완료되고 제2회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때 경남도당국은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대금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공사로 가옥과 농작지를 잃은 농민들은 지대조차 받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도당국은 내년 4월까지의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농민들에게는 한시가 시급한 생존의 문제였으므로 이주민 지주대표 김성권(金性權) 외 4인이 경남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항의하였다.<sup>62)</sup>

공사로 피해를 입는 것은 농민들만이 아니었다. 일천식공사의 일환으로 하동면과 녹산면 성산포를 막아 선박의 출입이 끊기면서 서낙동강의 지류가 끊기고 기존의 낙동강 물화운반 방식은 모두 두절되었다. 낙동강 지류 폐색은 낙동강 유역을 이용하여 선편으로 물화를 운반하던 물류, 운송업자들과 생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생산자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피해 읍면은 김해군 김해읍과 가락면, 명지면과 녹산면이었다. 무역상 김금식(金今植) 씨는 이 문제를 두고 김해 4면의 중대 문제이자 ‘고을의 사활문제’라고 말할 정도였다.<sup>63)</sup>

지류 폐색으로 인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1934년 1월 24일 녹산면에서는 해당 지역 면 유지들이 모여 진부선(鎭釜線) 도로지선과 조만포가교(潮滿浦架橋)기성회를 조직하였다.<sup>64)</sup> 또한 해당 4면에서는 시원

61) 『동아일보』 1931. 08. 14. 7면 7단, ‘낙동강개수 부담반대 진정’.

62) 『동아일보』 1932. 05. 28. 4면 8단, ‘낙동개수편입지 지대를 불발’.

63) 『동아일보(석간)』 1934. 01. 16. 3면 1단, ‘낙동강 지류폐색으로 물화운반에 대타격’.

64) “진부선도로가 진해를 기점으로 웅천을 지나 낙동강 하류를 폐색하는 김해군 녹산면 성산포에 이르러 하천도로에 연결시켜 그로부터 또 동군 명지면 중리에 이르러 하천도로 연락하여 동래군 사상면 사상역전으로 낙동강에 가교하여 연락을 시키는 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녹산면 성산으로부터 북으로 가락면까지 연락하는 지선도로를 개통하여 김해읍까지 연락시키면 동군의 물화운반은 전기 성산포가 기점으로 되어 각 방면으로 운수가 종전보다도 더욱 신속하여지리라...” 여겨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조만포가교기성회를 조직하였다. 선출된 준비위원은 갑斐인웅(甲斐寅熊), 양은석(梁

조치(市原助治), 갑비인웅(甲斐寅熊), 배종탁(裴鍾澤), 안승태(安承太) 4인을 대표위원으로 선발하여 김해군수 및 경남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성산포 하천도로의 지선도로인 소위 조만포가교를 국비로 개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sup>65)</sup> 이렇듯 낙동강 하류부의 지역민들은 일천식공사로 인한 생업의 존폐 여부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어민들 역시 일천식공사의 피해자였다. 하단과 다대포, 명지 쪽의 주민들은 강 어구에서 매년 생산되는 해태(海苔)에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는데 일천식공사라는 인위적 재해가 가져온 홍수로 하단 부근에 담수가 대량으로 섞이면서 해태가 생산되지 않게 된 것이다. 해태 외에도 해수에 서식하던 어류들이 담수의 유입으로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기존의 하단 방면 조업은 거의 대부분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와는 반대로 선암 측 지류의 담수가 해수화 되어 잉어 등이 상류로 이동하면서 부근 주민들의 생업이 위협받기도 하였다.<sup>66)</sup>

이러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개수공사는 착착 진행되어 나갔다. 그러던 중 1933년 7월의 홍수는 낙동강 유역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었다.<sup>67)</sup> 주민들은 일천식공사의 지연으로 홍수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며 조선총독부 및 경남도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항의하였다. 총독부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공사를 재촉하여 내년(1934년) 봄 파종기까지는 준공함으로써 낙동강 하류지역을 빠르게 안전지대화 하겠다고 공언하였다.<sup>68)</sup>

銀錫), 김종교(金鍾敎), 배은효(裴恩孝), 조규갑(曹奎甲), 강석문(姜錫文), 안승태(安承太), 최해권(崔海權), 최창준(崔昌俊), 배종택(裴鍾澤)의 총 10인이었다(『동아일보』 1934. 02. 02. 5면 1단, ‘낙동강 폐색대책으로 연락도로를 축성’).

65) 『동아일보』 1934. 02. 27. 3면 1단, ‘낙동강 폐색 대신으로 진부로(鎭釜路) 지선(支線) 운동’.

66) 『동아일보(조간)』 1934. 05. 26. 6면 1단, ‘일천식개수 낙동강공사’.

67) 본문 II장 1절 참고.

하지만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는 일천식공사에 주민들은 다시금 불안해졌다. 특히 동래군 구포면의 화명·금곡 2개리는 일천식공사로 낙동강 지류인 선암강 입구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은 전혀 설치되지 않아 불안은 더욱 커져갔다. 그리하여 해당 2개리 소작인 대표 유경춘(柳慶春) 외 8인은 1934년 2월 3일 경남토목과 초량출장소를 방문하여 화명·금곡 2개리 강안에도 하루 빨리 제방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sup>69)</sup>

하지만 두 달 여가 지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주민대표인 구포면 장 장익원(張益遠) 씨 외 3인은 국비 3만 여 원을 들여 제방 공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3월 26일에 제출하였다. 총독부는 주민들의 요청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회답했으나 실상 3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소요되리라 예측되는 호안공사가 빠르게 착공될 리는 만무했다.<sup>70)</sup>

## 2) 공사로 인한 수해와 맥작보상진정(陳情)사건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1934년 5월에는 3일간 비가 내렸다. 강우량은 약 200mm로 봄비 치고는 강한 비였지만 실농(失農)을 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비로 김해평야는 “바다로 화”하고 “맥전과 묘판이 침수전멸”을 당하는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sup>71)</sup> 이는 모두 일천식공사의 여파였다.

우선 ① 일천식공사의 준공기가 예정보다 지연되었던 점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 또한 ② 공사 과정에서 저수관개지화 한 선암강 유역

68) 『동아일보』 1933. 09. 02. 3면 7단, ‘문제의 낙동강공사 연래춘기까지 준공’.

69) 『동아일보(조간)』 1934. 02. 26. 5면 4단, ‘수해의 우려, 제방을 진정’.

70) 『동아일보(석간)』 1934. 03. 24. 3면 6단, 위의 기사; 1934. 03. 27. 2면 1단, ‘낙동강수해위험 이천주민대표 진정’.

71) 『동아일보(석간)』 1934. 05. 11. 3면 1단, ‘금년최초의 홍수난 김해평야는 수해화’.  
『동아일보(조간)』 1934. 06. 09. 1면 1단 사설, ‘낙동강공사 문제 주민의 요구 들어주라’.



의 하류에 10개의 수문을 설치하였는데 이 수문이 세간의 우려대로 붐비로 불어난 물을 충분히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③ 불완전한 공사로 인한 수문개폐의 조절 문제로 저수지의 농수가 해수화 되자 당국은 저수지 물을 빠르게 내보내기 위하여 축조하였던 제방을 20간 정도 끊어 버렸는데 이곳이 3일 간의 비에 무너지면서 하류부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sup>72)</sup>

예상외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처지는 처참했다. 대저면 내 약 500여 정보의 논보리 밭이 누렇게 썩어가고 있었으며 하동면도 대저면 절반 정도의 면적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평소 홍수 피해를 거의 겪지 않았던 명지면도 일천식공사의 여파로 보리를 심은 논이 모두 침수되어 풋보리 썩는 냄새에 코를 들지 못할 지경이었다. 가락면과 녹산면, 동래군 사상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sup>73)</sup> 소작농민의 부녀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구포 방면에서 온종일 채취한 풀뿌리를 머리에 이고 수십 명씩 줄지어 낙동교를 건너는 진풍경이 매일 같이 펼쳐졌다.<sup>74)</sup>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농가에서는 일천식공사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 이번 수해는 일천식공사로 인한 인재였으며 그 피해가 막심하므로 국고보상은 마땅하고 필수적인 일이라는데 지역민들의 의견이 일치

72) 『동아일보(석간)』 1934. 05. 20. 3면 4단, ‘맥작, 양관피해 보상요구결정’. 『동아일보(조간)』 1934. 05. 24. 5면 1단, ‘일천식개수 낙동강공사’; 1934. 06. 09. 1면 1단 사설, 위의 기사.

73) “동래군 사상면 엄궁리에 농민을 만나 …(중략)… 사상면은 정말 큰일났소, 낙동개수 공사 하기 전에는 농산지로는 유명하던 지방인데 낙동개수로 큰 제방을 막아 사상면의 천연수는 낙강으로 흐르지 못하고 농토에 고이게 되어 웅덩이로 화하여 비가 조금만 내려도 피해가 막대하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곳 면장의 말에 우리 사상은 석일(昔日: 옛날)은 농산지나 급야는 양어장화 하였다는 말이 참말입니다 하며 지난번 홍수 때에 침수되었던 보리밭이 수확기나 된 것 같이 누렇게 말라버린 것을 가르쳐주며 이곳에 맥작은 저 지경이니 우리들은 정말 큰일이요 …(후략)” (『동아일보(조간)』 1934. 05. 23. 6면 1단, ‘일천식개수 낙동강공사’).

74) 『동아일보(조간)』 1934. 05. 24. 5면 1단, 앞의 기사; 1934. 05. 25. 6면 1단, ‘일천식개수 낙동강 공사’.

하여 피해 농민들은 일제히 당국에 국고보상을 요청하였다. 선암장의 선두(船頭) 노인의 말에서도 당시의 여론을 살펴볼 수 있다.

3월 중에 홍수로 보리밭에 물 담기는 금년이 처음이니 지난번 비가 봄비로 그리 큰 비가 아닌데 이렇게 물을 담게 된 것은 오직 체절공사에 원인이라고 하겠지요. 하부는 막아두고 상부에는 물을 내려 보내니 그 물이 갈 데 어디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번 피해는 당국에서 마땅히 물어주어야겠소.<sup>75)</sup>

경남도청에는 매일 2, 3건 이상의 수해 보상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sup>76)</sup> 하지만 도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경남도청의 손영목(孫永穆) 산업부장은 낙동강 하류부의 수해가 일천식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약간의 구제방법은 고려중이나 국고보조로 보상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이에 분노한 대저면, 가락면, 녹산면 일대의 주민 2천 여 명은 1934년 6월 6일 이른 아침부터 썩은 보릿단을 등에 지고 보리밥 꾸러미를 각각 손에 들고 경남도청으로 몰려들었다.<sup>77)</sup> 평당 5전의 맥작 보상을 진정한 농민들의 시위는 경찰의 제지도 불구하고 점차 더욱 험악해져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겨우 해산시킬 수 있었다.<sup>78)</sup> 소위 ‘맥작 전면보상 진정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당시 주민들의 항의는 격렬하였다.<sup>79)</sup>

『동아일보』도 6월 9일자 1면 사설에서 “개수공사 자체와 또는 그 방식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특수주민의 이해가

75) 『동아일보(조간)』 1934. 05. 24. 5면 1단, 앞의 기사.

76) 『동아일보(석간)』 1934. 05. 30. 3면 1단, ‘낙강하류수재농민 국가보상진정부절’.

77) 『동아일보(석간)』 1934. 06. 07. 2면 1단, ‘일천식공사에 또 재해를 입고’ ; 1934. 06. 07. 2면 1단, ‘국고보상이 없으면 생도가 막연한 그들’.

78) 『동아일보(석간)』 1934. 06. 09. 2면 1단, ‘관수지사일행이 총독부와 협의 중’.

79) 『동아일보(석간)』 1934. 06. 10. 2면 1단, ‘보상 문제는 뒷일, 위선피해민구제’.

불의로 희생될 경우에는 당국은 마땅히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더 나아가 도 당국이 내놓은 내제방(內堤防) 설치와 배수갑문의 시설이라는 대책 역시 이번 수해가 확실히 공사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피해보상을 촉구하였다.<sup>80)</sup>

인심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도당국은 기존의 의례적 실지조사가 아닌 실질적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밝혀진 피해 정도는 피해 면적 약 3,000여 정보, 피해액 약 20만 원, 피해인구수 약 2만 4천 여 명이였다.<sup>81)</sup> 경남도청의 관수(關水) 지사 및 산업과장, 지방과장은 총독부 측과 피해 대책을 협의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우도(牛島) 내무국장은 ‘보상 문제보다도 당면의 구제문제가 급무’라며 참담한 농민의 상황을 우려하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보상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려는 것에 불과했으며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sup>82)</sup>

피해 농민들은 평당 5전 씩 총 1,200만 원의 국가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총독부 및 경남도당국 측에서는 요구액의 반액 정도를 보상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 출장을 갔던 복내(福內) 기사가 공사에 의한 수해가 아니라는 보고를 올리자 당국과 주민들의 의견 차는 더욱 커져갔다. 논의 끝에 조선총독부는 낙동강 개수공사 착공 전 2년간의 자연수해 평균액과 개수 후 수해액과의 차액을 낙동강 개수공사비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보상최고액으로 약 20만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서 무려 60배나 줄어든 금액이었다. 심지어 그 20만 원 조차 전액을 지불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sup>83)</sup>

80) 『동아일보(조간)』 1934. 06. 09. 1면 1단 사설, 앞의 기사.

81) 『동아일보(석간)』 1934. 6. 09. 2면 1단, ‘낙동강민 대거 진정 그 후’.

82) 『동아일보(석간)』 1934. 06. 10. 2면 1단, 앞의 기사.

83) 『동아일보(석간)』 1934. 06. 13. 2면 5단, ‘천이백만 원 요구에 보상은 20만 원 내외?’.

결국 낙동강 하류부의 맥작 피해보상은 과거 5개년 간의 수해 피해전답의 평년·풍년·흉년작의 반당수확을 기준으로 피해 지구를 각 동리별로 구분하여 반당 수확량을 산출하고 이를 최근 보리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 최초의 재해지 국고보상 결정이었으나 실지조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는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sup>84)</sup>

살펴본 바와 같이 낙동강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쪽을 택하였다.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나 생계의 위협 앞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정부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기성회 같은 단체를 결성하는 등 합법적인 정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조만포가교기성회의 조직이나 맥작 전면보상 진정운동은 지역에 이해관계를 둔 일본인·조선인 모두가 식민지 공간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적인 발언의 장을 이용하여 지역 현안과 문제점들을 표면화시키고 이를 조정하려고 시도했던 일례이다. 식민지 하의 조선인은 일상적·보편적으로 일제 당국에 저항하고 있었으며 그 저항은 필요에 따라 일본인·자본가 등의 지역유지를 매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민족별·계층별 구분 없이 행해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sup>85)</sup>

『동아일보(조간)』 1934. 06. 14. 1면 1단 사설, ‘수해보상금 문제’.

84) 『동아일보(석간)』 1934. 06. 16. 3면 1단, ‘김해의 맥작피해 보상키로 수확정’.

85)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는 식민지 하의 조선인은 “저항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일상적·도착적·보편적이어서 그만큼 지배자에게는 더욱 만만치 않고, 끈질기고, 강해서, 탄압할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으며, 전혀 손을 쓸 방도가 없는 두터운 민족의 벽”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표현한다(松本武祝, 앞의 책, 2011, 46~47쪽에서 재인용).

## 2. 공사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대응

### 1) 낙동수리조합 설립 문제와 이해관계의 대립

일제강점기 낙동강 유역의 면·동·리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여러 기간시설들이 정비되었고 하천개수공사로 인해 낙동강 유역 평야와 몽리구역이 확장되었으며 철도역과 농장이 설치되어 특정 면의 위상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진통이 따랐다. 변화로 인한 소속 면·동·리의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 정부 당국 대 주민, 혹은 이해당사자 주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 것은 일천식공사에 따른 수리조합 설치문제와 기반시설 이전문제였다.

경남도당국에서는 일천식공사로 생기는 김해군 대지면·명지면·녹산면·주촌면·김해면·가락면·하동면·장유면 등 8개 면의 미개답지 약 12,000정보에 2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낙동수리조합(이하 낙동수조)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 중 관개가 필요한 구역은 기존 수리조합구역 면적에 해당하는 4,516정보를 제외한 약 8,500정보의 토지였다. 거기서 대저·명지면 하안의 사질지와 하천연안 저지(低地) 등을 제외하면 낙동수조의 예상 몽리면적은 대략 6,660여 정보였다.<sup>86)</sup> 최종 공사비는 167만원(1단보 당 공사비 4원 26전)으로 책정되었다.<sup>87)</sup>

낙동수조 설립 찬성 측 지주들은 김해군수 황덕순(黃德純)의 주도하에 8개 면에서 창립준비위원을 선발하고 1932년 9월 27일 창립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낙동수조의 설립을 준비하였다. 이때 찬성 측 여론을 주도하는 대지주는 몽리효과를 얻는 6,660여 정보 중 1,500여 정보를

86) 『동아일보』 1932. 12. 11. 3면 1단, ‘지주의 반대를 일축코 낙동수조를 창립’.

87) “사업비 167만원 내 국고보조 희망액 332,000원을 받고 그 잔액 1,318,000원 및 개답 기간 중 세입부족액 약 364,740원 합계 1,682,740원을 기채한다고 하면 조합연부금 150,437원(반당 2월 26전), 경상비 133,200원(반당 2원) 계 283,637원(반당 4원 26전)을 요함” 『동아일보』 1932. 12. 11. 3면 1단, 위의 기사.

차지하고 있었던 박간동척농장의 박간방태랑(迫間房太郎)이었다.<sup>88)</sup> 박간은 낙동수조 설립 시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낙동수조 창립위원회의 위원장이 박간(迫間) 본점 지배인 김동준(金東準)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sup>89)</sup> 찬성 측의 지주들은 낙동수조의 설립이 새로운 수답(水畝)을 만들어 파멸되어 가는 농가경제를 구할 것이며 수리조합 설립으로 1원 2전씩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sup>90)</sup>

하지만 많은 지주들이 낙동수조의 창립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낙동수조 설치를 반대하는 지주들은 ① 낙동강 하류부에는 이미 3개나 되는 기성 수리조합(김해·대저·하동수리조합)이 있어 뽕리가 필요한 구역이 그다지 많지 않고, ② 일천식공사로 인해 명지, 녹산, 가락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뽕리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이었다. 낙동수조 설립으로 인한 뽕리효과는 녹산, 명지, 가락면 내의 미개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91)</sup> ③ 게다가 예상 뽕리 필요구역인 6,660여 정보도 벌써 개인 지주의 힘으로 개간된 것이 4,400여 정보이며 그 나머지 구역 역시도 각 지주들이 양수기를 설치하여 개간에 착수하고 있으니 수리조합을 신설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의견이었다.<sup>92)</sup> ④ 반대 측 지주들은 낙동수조의 설립이 일천식공사 부담금에 수리조합 설립 관련 부채까지 더해져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며, 이익보다는 손해가 큰 사업이라는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sup>93)</sup>

88) 『조선신문』 1932. 10. 28. 4면 2단, ‘洛東水利組合反對運動具體化, 二十六日有志から道當局へ委細陳情’.

89) 『조선시보』 1932. 09. 30. 2면 7단, ‘洛東水利組合創立委員會開催創立費豫算等決定, 廿九日金海郡廳で’.

90) 『중앙일보』 1932. 11. 08. 2면 8단, ‘낙동수리조합 설치반대양파의 반목’.

91) 『동아일보』 1931. 12. 22. 3면 4단, ‘낙동수리조합 지주들은 반대’.

92) 『동아일보』 1932. 12. 30. 3면 1단, ‘사천사백여 정보는 지주자력으로 개간’.

93) 『동아일보』 1932. 11. 26. 3면 1단, ‘낙동강수리조합 설립반대를 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 및 찬성 측의 지주들은 법규에 따라 구역 내 지주의 총 수 2/3 이상, 면적 1/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찬성과 측에서는 각 읍면 관계자들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1,750여 명의 지주 중 1,300여 명의 찬성 날인을 얻었으며,<sup>94)</sup> 이를 근거로 낙동수조의 설립계획을 허가받았다.<sup>95)</sup>

이에 설치반대파는 낙동지주회를 창립하고 임원을 선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임원은 회장에 식전의부(植田義夫), 부회장에 시원조치(市原助治), 장진원(長鎭遠), 실행위원에 반전승정(飯田勝正), 고뢰수실(高瀨秀實), 고한주(高漢柱)가 선발되었다.<sup>96)</sup> 1932년 11월 20일에는 설치반대파 측 부산·김해 지역 지주들이 부산 동본원사 부인회관에서 회합하여 절대반대를 결의하였으며 11월 24일과 25일에는 도 당국을 방문하여 반대의견을 진정하기도 하였다. 2/3에 이르는 찬성 날인에도 불구하고 낙동수조의 창립은 ‘상당한 설계도 없고 예산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며 ‘너무도 이해를 떠난’ 일로 인식되고 있었다.<sup>97)</sup>

그러나 낙동수조 설립은 반대파의 의견을 묵살한 채 진행되었다. 이에 반대파 지주들은 당국이 “단지 민중의 무지를 이용하여 구역 내의 지주에게 막대한 부담을 과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분개하면서 1933년 2월 5일 대저면 낙동소학교에서 반대측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는 무려 200여 명에 이르렀으며 이 위원회에서 총독부와 동경정부에 위

94) “찬성 측에 날인한 1300여 명도 모두 철저한 이해를 이해하고 과연 날인한 것”인지, “면직원들이 출장하여 날인을 요구함으로 이해를 해석치도 못하고 무의식적 날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동아일보』 1933. 02. 14. 5면 1단, ‘낙동수조의 반대를 결의’).

95) 『동아일보』 1932. 11. 05. 3면 3단, ‘낙동지주회 수조창립반대’ ; 1932. 11. 19. 3면 1단, ‘지주반대도 불구하고 낙동수조 창립결정’.

96) 『부산일보』 1932. 10. 28. 1면 5단, ‘洛東水利設立に反對の烽火を擧ぐ’.

97) 『동아일보』 1932. 12. 03. 3면 1단 지방논단, ‘낙동수리조합문제’.

원을 보내 낙동수조 설립 반대 의견을 진정할 것을 결의하였다.<sup>98)</sup>

당국과 설치반대파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저수지에 해수가 침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농사는 물론 식수 공급에까지 차질이 생기자 설치반대파 측에서는 이 피해가 낙동수조 창립에 몰두하느라 일천식공사를 지연시킨 김해군수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주민들은 격분하여 김해군수에게 몰려가 사직을 강권하고 이와 관련한 군민대회까지 개최할 것을 다짐하는 등 갈등이 점차 격화되었다.<sup>99)</sup> 그럼에도 도당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낙동지주회에서는 총 공비 35만원으로 당국에서 말하는 수리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sup>100)</sup>

낙동수조의 설립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낙동지주회의 반대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총독부는 가등(加藤) 기사를 보내 지주회 중요간부를 불러 당국안과 지주회안의 절충을 시도하였다. 당국안은 공사비를 99만 7천원으로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지주회는 지주회안인 38만 5천원을 고집함에 따라 이 절충교섭도 끝내 결렬되었다.<sup>101)</sup>

## 2) 기반시설 이전문제를 둘러싼 갈등

낙동수조 문제와 함께 낙동강 하류부의 기반시설 이전문제도 지역민간의 갈등을 야기했다. 일천식공사로 인한 대저시장과 대저면사무소 이

98) 『동아일보』 1933. 02. 14. 5면 1단, ‘낙동수조의 반대를 결의’.

99) 『동아일보(석간)』 1933. 03. 18. 3면 5단, ‘김해 4개 면민대표 군수사직을 강박’.

100) 『동아일보(석간)』 1933. 05. 21. 3면 1단, ‘문제의 낙동수조 지주회 성명발표’; 1933. 05. 28. 3면 5단, ‘낙동수조와 경남수조 쌍방태도가 강화’. 이 때 낙동지주회에서 설립을 계획한 수리조합의 조합명은 경남수리조합이었다.

101) 『동아일보(조간)』 1933. 06. 11. 3면 8단, ‘가등기사 절충안도 지주회에서 일축’. 이후 산미증식계획의 일시 중지로 신설수리조합들의 설립 역시 중단되었다. 1935년 미가의 안정에 따라 낙동수조의 설립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나 이후로는 낙동수조 관련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朝鮮時報』 1935. 12. 14. 3면 7단, ‘農村景氣で水利組合を再興, また洛東水利らその復活を計畫す’).



전 설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먼저 대저시장의 이전문제는 일천식공사로 김해군 대저면의 사덕리(沙德里), 출두리(出頭里) 일부가 제방 공사용 흙을 파내는 채토장에 편입되면서 발생하였다.<sup>102)</sup> 이로 인해 사덕·출두리의 4~500호가 이주해야 했으며 대저면의 최북단 출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저시장도 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03)</sup>

1932년 3월 경 대저시장의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대저면 각 동리의 주민들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위치 쟁탈전을 시작하였다. 남측의 주민들은 대저시장이 위치 상·인구비례 상 중심이 되는 소덕리(小德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측 주민들은 대저시장의 본래 위치와도 가깝고 낙동철교 가설로 대저 교통의 관문이 된 사덕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sup>104)</sup>

남측과 북측의 쟁탈전은 점차 과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남측 주민들은 천여 명이 모여 시민대회를 열고 시장기성회를 조직, 기성회결의문을 제작하였으며 면장에게 연일 진정을 넣었다.<sup>105)</sup> 이에 북측의 주민들은 낙동소학교 대광장에서 북부면민대회를 계획하였으나 경찰당국의 저지로 개최하지 못하고 북부면 유지회와 면협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위치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sup>106)</sup> 이러한 과정에서 4개월이 넘도록 위치를 정하지 못한 대저시장은 본래의 시장 위쪽 하천공사지에 임시로

102) 『부산일보』 1932. 03. 31. 2면 9단, ‘대저면 시장 이전문제, 상부하부지원민간에 맹렬한 유치운동’. 『중앙일보』 1932. 04. 04. 3면 1단, ‘면장불신임, 예산안반상, 시장 문제로 파란 일으킨 김해대저면협의회’.

103) 『동아일보』 1932. 08. 30, ‘낙동강 개수공사편입이민 이주대지문제화’.

104) 쟁탈전 초기에는 사두리와 대지리(大地里), 두 곳이 논쟁의 중심이었으나 이후 소덕리와 사덕리 두 곳으로 논쟁의 중심지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932. 02. 23. 3면 3단, ‘대저시장 이전, 서로 끌라고 야단’; 1932. 3. 18. 3면 3단, ‘김해대저시장 위치쟁탈, 면장과 면민 간 서로 쟁탈한다’. 『동아일보』 1932. 03. 23. 3면 3단, ‘대저면시장의 위치문제 속히 결정하라’. 『중앙일보』 1932. 03. 26. 3면 1단, ‘김해대저시장 위치쟁탈 계속하는 중, 두 편이 진정’.

105) 『동아일보』 1932. 03. 04. 6면 2단, ‘시장위치 쟁탈’.

106) 『중앙일보』 1932. 03. 28. 4면 9단, ‘대저시장쟁탈 면민대회금지’.

이전하여 개장하기도 하였다.<sup>107)</sup>

1932년 4월이 되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북부 측 면협의회원들은 면장이 남부 측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이유를 들어 면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사직을 권고하였다. 또한 불신임하는 면장이 제안한 예산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장 위치문제를 더욱 강하게 진정하였다.<sup>108)</sup> 경남도와 김해군당국이 격렬한 주민들 간의 갈등 앞에 대저시장의 위치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자 갈등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sup>109)</sup>

수개월이 지난 6월 28일 김해군수 황덕순이 대저면협의회원 일동을 군청으로 소집하여 소덕리와 사덕리 2개소에 모두 시장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저시장 문제는 겨우 해결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소덕시장비 297,700원과 사덕시장비 445,350의 시장 설치 예산도 원만히 통과되었다.<sup>110)</sup> 2천 여 호의 농촌에 상민은 수십 호에 불과한 대저면에 2개 소의 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sup>111)</sup> 대저면에서는 1932년 9월 7일 사덕리 대저시장과 소덕리 덕두시장의 2시장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다.<sup>112)</sup>

1933년부터 사덕리와 소덕리에서는 시장 설치를 위해 장소 정리에 들어갔으며 소덕리 덕두 5일장(5·10일장)은 음력 정월 25일에 개시, 대

107) 『동아일보』 1932. 03. 19. 6면 9단, ‘대저시장 임시총회’.

108) 『중앙일보』 1932. 04. 04. 3면 1단, ‘면장불신임, 예산안반상, 시장문제로 파란 일으킨 김해대저면협의회’. 『동아일보』 1934. 04. 13. 3면 3단, ‘대저시장문제로 면장배척, 옹호’.

109) 『동아일보』 1932. 04. 30. 3면 3단, ‘대저면시장 위치 문제’.

110) 『부산일보』 1934. 07. 01. 2면 12단, ‘군수의 재단으로 대저시장문제해결’. 『동아일보』 1932. 07. 03. 3면 6단, ‘대저시장 위치’. 『동아일보』 1934. 07. 08. 3면 7단, ‘대저면시장 필경 양처로 분할’.

111) 『동아일보』 1932. 07. 12. 3면 1단, 대저기자 칼럼, ‘1면 2시장제 불가’.

112) 『동아일보』 1932. 09. 11. 6면 4단, ‘대저시장지 결정, 인가신청을 제출’; 1933. 01. 19. 3면 9단, ‘대저 양시장 불원에 인가’.

상황을 이루었다.<sup>113)</sup> 낙동교 부근기지 1,650평을 3,500원에 매입하여 시장 건축물까지 건설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던 사덕리의 대저시장은 1933년 윤5월 1일에 이전 개시하였다.<sup>114)</sup>

일천식공사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대저시장 위치문제가 해결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곧바로 대저면사무소 위치 문제로 이어졌다. 개수공사로 인해 이전하게 된 대저면사무소의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또 진통이 발생한 것이다. 대저면에서는 면사무소를 1933년도 예산건축비 5천 원에 낙동교 부근으로 이전하는 안을 면민들에게 통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저면민 800여 명은 1933년 3월 29일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사무소는 면의 중앙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경찰의 만류로 겨우 해산하였다.<sup>115)</sup> 면사무소 문제로 당시 면장이었던 김봉수는 사임까지 하게 될 정도였다.<sup>116)</sup>

그런데 이 문제의 불똥이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튀었다. 1922년 대저학술강습회로 시작한 사립 대성학교가 대저면사무소 위치로 인한 주민갈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것이다. 대성학교는 대저면의 최북단인 대저리에 설립된 대저공립보통학교까지 통학하기 어려운 대저면 남부 쪽의 아이들을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경영한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북부 측의 주민들이 대저시장 위치 문제와 뒤이은 대저면사무소 이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대성학교 경비 문제로 확대시켜 교육 부담금의 지불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었다.<sup>117)</sup>

113) 『동아일보』 1933. 02. 15. 3면 4단, ‘덕두시장 인가’. 『부산일보』 1933. 02. 18. 2면 10단, ‘대저면 덕두시장, 19일부터 개장’. 『동아일보』 1933. 02. 23. 3면 2단, ‘덕두시장 개시, 무려 2만여 명’.

114) 『동아일보』 1933. 05. 30. 3면 4단, ‘문제의 대저시장 남북양소 설치’. 『부산일보』 1933. 05. 30. 1면 8단, ‘대저면에 생긴 변태시장, 29일부터 개장’. 『동아일보』 1933. 06. 07. 3면 4단, ‘대저시장문제, 불원 허가될 듯’ ; 1933. 06. 24. 3면 6단, ‘대저시장 이전을 허가’.

115) 『동아일보』 1933. 04. 02. 3면 4단, ‘면소 위치 이전 반대 팔백면민 면에 쇄도’.

116) 『동아일보』 1934. 01. 11. 2면, ‘면소위치문제로 대성교 경영난’.

이로 인해 1934년 1월에는 대성학교의 존재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대저면 하부 측의 덕두·소덕·사두·울만·도도·맥도 6개리에서는 동년 3월 10일 주민대회를 개최하여 면사무소를 면 중앙부에 설치하게 하자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대저면사무소 중앙부 설치기성회까지 조직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sup>118)</sup> 대저면사무소 이전 문제는 1934년 4월 면장 이석호(李錫鎬)가 면사무소의 위치를 교통이 편리한 북측 낙동교 부근으로 결정하고 8월 20일에 공사를 마침으로써 겨우 일단락되었다.<sup>119)</sup> 이로써 일천식공사가 야기한 기반시설 이전문제와 관련된 대저면민간의 갈등은 가까스로 종식되었다.

낙동수조의 설립과 대저시장 및 대저면사무소 이전은 낙동강 하류부 지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층적으로 얽히면서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식민지라는 상황에서도 지역민들은 민족별로, 혹은 계층별로 연대하여 불균등한 자원 분배와 자원 이용 및 개발 상의 이해대립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민들이 수해 구제 문제 등과 같은 직접적 생존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일상적 손익 문제에서도 끈질기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역 현안과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와 소작농민을 가리지 않고 합심하여 수요자 간의 합의를 형성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지역정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거나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117) 1922년 대저면의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경영한 대저학술강습회가 1932년 8월 31일 대성학교로 승격 인가되었다. 10여 년 간 수천 명의 미취학아동을 수용하여 보통학교에 준하는 성적을 내었다(『동아일보』 1933. 10. 21. 5면 1단 칼럼, ‘대성학교의 난관’; 1934. 01. 11. 2면, 앞의 기사).

118) 『동아일보』 1934. 03. 15. 3면 8단, ‘대저면소 위치로 피차에 갈등’.

119) 『동아일보』 1935. 09. 11. 3면 5단, ‘문제의 대저면소 신축교 이전’.

#### IV. 맺음말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조선의 하천조사 및 하천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일제는 1914년 4월 <하천취체규칙>을 발표하고 주요 직할하천을 대상으로 제1기 하천조사(1915년~1928년)를 실시하였다. 이 하천조사를 바탕으로 국비지변계속치수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하천개수공사가 10개년 계속사업(1926년~1935년)으로 시행되었다. 낙동강 하천 개수비가 주요 직할하천 6개 치수사업비 총액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았다.

낙동강 하천개수공사에서 가장 주요한 구간은 낙동강 하류부였다. 일제 당국은 낙동강 최하류인 대저면 주위의 두 갈래 강물을 한 갈래로 흐르게 하는 일천식하천개수공사를 통해 개수몽리구역의 증가와 구역내 확실한 수해 방지, 그리고 생산 증진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 공사가 당국의 이상적 설계대로만 실현된다면 낙동강 하류부 평야의 경제적 이익은 증가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 증대된 이익은 대부분 일본인地主주들의 것으로 조선인의 것이 아니었다. 낙동강의 하천개수사업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민족별 불평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사실상 일본 제국의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일천식공사는 착수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우선 공사로 인한 부담금 및 토지대금 문제는 소작농민과 이주 농민들의 삶을 점차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물류·운송업자와 어민들은 생업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일천식공사가 가져온 인위적 수해로 김해평야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때마다 낙동강 하류부의 주민들은 군·도당국, 나아가서는 조선총독부에까지 적극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항의하거나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맥작 전면보상 진정사건이 그 일례이다. 조선총독부 최초의 재해지 국고보상 조치라는 성과는

낙동강 하류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정치에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행위자인 지역민의 역동성과 존재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은 식민지 권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하천개수로 인한 공공기관 및 시설들의 설치·이전·폐쇄 등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였다. 지역민들은 일상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진정은 물론 지주회, 기성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시민대회, 군민대회를 개최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식민지 권력의 중개자이자 협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수나 면장의 사직을 강권하는 등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제는 하천개수사업의 시행을 통해 낙동강 하류부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는 이 지역 일본인 지주들과 일부 조선인 유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자 식민지 권력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가시적인 성과였다고 생각된다. 하층 농민들은 개발로 인한 극심한 수해와 일상적 이해관계의 충돌, 더 나아가서는 생존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다. 소기의 목적 하에 추진되었던 식민지적 하천 개발이 가져온 수혜는 민족별,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식민지 권력과 지역사회, 지역사회 내 지역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사업별, 지역별로 생겨난 다면적인 이해관계들이 중층적으로 얽히면서 지역단위의 정치 행위들은 역동적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이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대응방식-개인적 혹은 집단적인-은 일종의 근대를 체화해나가는 경험의 장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일천식공사와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의 경관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촉발시켜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일상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변자료들과 신문이라는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입장을 선명하게 살펴보는데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신문 기사를 통해 지역정치에 언론 역시 가세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민족별·계층별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낙동강 하류부에서 전개된 지역정치의 일면을 보다 뚜렷하게 구명해내지 못한 점, 지역 유지의 역할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 지역의 여러 사건과 현상을 신문기사를 근거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이 부족함을 다음 연구의 또 다른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시대일보』, 『조선시보』, 『조선신문』, 『조선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외일보』

朝鮮總督府編, 『昭和十一年の風水害誌』, 1938.

조선총독부, 『1928년까지 조선토목사업지-하천개수편(1937년)』, 국토해양부, 2010.

조선총독부, 『1934년 남선의 홍수(1936년)』, 국토해양부, 2010.

조선총독부, 『1935년 조선 직할하천 공사연보(1938년)』, 국토해양부, 2010.

조선총독부, 『조선의 하천(1935)』, 국토해양부, 2010.

조선총독부, 『조선하천조사서(1929년)』, 국토해양부, 2010.

조선총독부, 『치수 및 수리답사서(1920년)』, 국토해양부, 2010.

### 2. 저서 및 논문

고태우, 『식민 토건업자의 ‘과점동맹’: 1920~30년대 초 조선토목건축협회연구』, 『역사문제연구』 38, 2017.

김영미, 『일제시기 도시문제와 지역주민운동-京城지역 성북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로-」, 『서울학연구』 28, 2007.
- 김 원, 「기록적인,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1934년 남부지방의 홍수」, 『하천과 문화』 8, 2012.
- 박철하, 「1925년 서울지역 수해이재민 구제활동과 수해대책」, 『서울학연구』 13, 1999.
- 松本武祝, 『조선농촌의 식민지 근대 경험』, 논형, 2011.
-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삼인, 2006.
- 염복규, 「일제하 도시지역정치의 구도와 양상-1920년대 경성 시구개수 이관과 수익세 제정 논란의 사례 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 2011.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 이병태, 『김해지리지』, 김해문화원, 1991.
- 이용기, 「일제시기 면 단위 유력자의 구성과 지역정치-전남 장흥군 용산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67집, 2009.
- 정계향,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구언양군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7, 2013.
- 鳥海豊, 「일제하 수리조합사업과 일본인 토목청부업자」, 『한국문화』 68, 2014.
- 최병택, 「1920년대 초~1930년대 전반기의 하천개수사업과 토목청부업 비리」, 『사학연구』 118, 2015.
- 최병택, 「일제 강점기 하천개수사업의 전개와 그 문제점」, 『인문논총』 제75권 제2호, 2018.
- 허수열 외, 『일제문서해제-토목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10.
- 허수열, 「일제강점기 하천개수의 식민지적 성격-만경강 개수를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1-2, 2012.
- 廣瀨貞三, 「植民地期の治水事業と朝鮮社會-洛東江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1999.
- 廣瀨貞三, 「一九三四年朝鮮南部の洪水と復旧活動-洛東江を中心に」, 『年報朝鮮學』 21, 2018.



| Abstract |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on the lower Nakdong River in the 1920~30s and the Reaction of the Local Residents

Ko, Na-Eu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planed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the lower Nakdonggang River with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There are two major objectives of the project: consulting convenience of Japanese landowners and a part of local influentials of Joseon in that area; promoting its results as a tangible achievement for maintaining the governing authority.

However, the lower class of that district had to suffer a numerous conflict of interests caused severe flood damages and forced developments during the project, which possibly led to life-threatening situation in many ways. The benefits from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had been unevenly distributed by classes or nationals, causing conflicts not only among the colonial authority and the local community, but also between locals within the community.

In order to gain profits and to protect themselves, the locals seek to respond collectively and politically. Therefore,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eventually sparked a series of protests stemmed from politics of everyday life, in which local residents could embody the modernity in the course of resistant movements against the project and the authority.

**Key words:** River Improvement Project, Nakdong River, local politics, colonial development, Confluence construction of two adjoining river streams into a singular channel

